



주간 통일정세

2012-42

Contents

- >> I. 북한동향 1. 대내동향 2. 대외관계 3. 대남동향
- >>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의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동향

1. 대내동향

가. 정치

- **北 김정은, 당 창건일 맞아 금수산태양궁전 참배(10/10, 조선중앙통신)**
 -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노동당 창건 67주년 기념일인 10일 주요 군 간부를 대동하고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참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이 통신은 이날 "김정은 제1위원장이 당 중앙군사위원회, 국방위원회, 최고사령부 작전지휘성원과 함께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김일성·김정일에 경의를 표했다"고 밝혔으며, 김 제1위원장은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위원장의 대형 초상화인 '태양상'에 경의를 표한 뒤 김일성 주석의 시신을 참배했다고 보도함.

- **北 현영철 총참모장, 대장 계급장 달고 등장(10/10, 노동신문)**
 - 북한군 차수인 현영철 군 총참모장이 10일 노동당 창건 67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에서 대장 계급장을 잇따라 달고 나타났다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보도함.
 - 신문은 이날 1면에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군 고위간부들과 김일성 주석,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한 사진을 실었는데 현 총참모장은 대장 계급장을 달고 김 제1위원장의 바로 왼쪽에서 거수 경례를 하고 있다고 전함.
 - 또 조선중앙방송은 이날 오후 고위간부들이 은하수음악회 '그리운 어머니'를 관람한 소식을 보도했는데 여기에서도 현 총참모장은 대장 계급장을 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힘.

- **北 김정은, 당 창건 기념 모란봉악단 공연 참석(10/11, 연합뉴스)**
 - 북한 김정은 정권이 처음 맞는 노동당 창건 기념일 행사를 비교적 조용하게 치른 가운데,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10일 저녁 평양에서 열린 모란봉악단의 축하공연에 참석했다고 연합뉴스가 이날 보도함.
 - 90분간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김정은 위원장의 고모 김경희 노동당비서와 김 비서의 남편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이 동석했으나, 부인 이설주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으며, 특히 이날 공연에선 공연장 내부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을 통해 김정은 위원장이 안경을 쓴 채 일하는 모습이 상영돼 눈길을 끌었는데 북한을 방문 중인 한 외국인은 김 위원장이 안경을 쓴 모습을 본 것은 처음이라고 전함.



● 北 김일성광장서 마르크스·레닌 초상화 '철거'(10/12, 연합뉴스; 엔케이 뉴스)

- 북한 평양의 김일성광장 건물에 걸려 있던 '사회주의 창시자' 마르크스와 레닌의 초상화가 사라진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고 12일 연합뉴스가 전함.
- 12일 미국 북한전문 웹사이트인 '엔케이뉴스'(www.nknews.org)가 동영상공유 사이트 등에 올라온 김일성광장 사진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촬영된 사진에서는 노동당사 외벽에 걸려 있던 마르크스와 레닌 초상화가 보이지 않음.
- 지난 4월15일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김일성 주석 탄생 100주년 기념 인민군 열병식 장면을 촬영한 외신 사진에서도 두 인물의 초상화는 발견할 수 없었음.

● 北 김정은 "컴퓨터·군사교육 강화해야"(10/13, 조선중앙통신)

- 김정은 제1위원장은, '혁명가' 유자녀 교육기관인 만경대혁명학원과 강반석혁명학원 창립 65주년에 즈음해 12일 이들 학교에 보낸 서한에서 "만경대혁명학원과 강반석혁명학원은 김일성·김정일혁명학원이고 선군혁명의 핵심 골간 육성기지"라며 이같이 강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3일 전함.
- 김 제1위원장은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컴퓨터의 이용범위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오늘의 현실은 학생들 속에서 컴퓨터 교육을 더욱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컴퓨터 실기과목의 비중을 높이고, 모든 학생이 응용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함.
- 그는 "만경대혁명학원과 강반석혁명학원에서는 인민군대 후비간부 양성 기지로서의 사명에 맞게 기초 군사지식을 습득시키기 위한 교육에 큰 힘을 넣어야 한"며 "학생들이 어릴 때부터 군인기질을 체질화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함.

● 北 김정은 경제개혁에 유연 "실패해도 괜찮다"(10/14, 마이니치신문)

-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올 들어 진행되고 있는 경제 개혁에 유연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14일 보도함.
- 이 신문은 베이징발 기사에서 복수의 북한 경제관계자 등을 인용해, 김정은 제1위원장이 경제 개혁에 대해 "실패해도 무방하다. 인민으로부터 불만이 나오면 정책을 변경하면 된다"고 말했다고 조선노동당이 주민에게 설명하고 있다고 전함.



■ 김정은동향

- 10/10, 김정은 黨 제1비서, '黨 창건 67돌' 즈음 10.10 0시 '금수산태양 궁전' 참배(10.10,중통·중방)
 - 최룡해, 현영철, 김경희, 김정각, 장성택, 리용무, 박도춘, 현철해, 김원홍, 오극렬, 최부일, 김경옥, 리병철, 김명식, 윤정린, 박정천, 김영철 등 당중앙군사위와 국방위, 최고사령부 작전지휘 성원들 참가
 - 라오스 총비서, 10.9 '당창건 67돌' 즈음 김정은 黨 제1비서에게 꽃바구니 전달/駐北 외교단, 꽃바구니와 축하편지 전달/中 현대국제관계연구원 대표단, 선물 전달/유엔아동기금 대표부 성원들, 10.9 만수대언덕 김父子 동상 참배(10.9,중통)
- 10/12, 김정은 黨 제1비서, 10.12 만경대혁명학원 및 강반석혁명학원 창립 65돌 즈음 同 학원 교직원 학생들에게 서한 송부(10.13,중통)
- 10/11, 김정은 黨 제1비서의 지시(보통강바닥파기와 호안공사를 인민군대가 맡아 할 데 대하여)를 관철하기 위한 '인민무력부 군인결기모임', 10.11 현영철·현철해 등 참가下 진행(10.11,중통)
 - 최룡해 동행, 김원홍(국가안전보위부장/대장), 김창섭(보위부 정치국장/상장) 등 영접
- 10/14, 김정은 黨 제1비서, 만경대 및 강반석혁명학원 창립 ('47.10.12) 65돌 경축대회 참가자들과 기념사진 촬영(10.14,중통·중·평방)
 - 참가자 : 최영림, 최룡해, 김경희, 장성택, 김영춘, 현철해, 오극렬, 태종수, 리병삼, 리을설·황순희· 김철만(항일빨치산 1세대), 오룡택(만경대혁명학원 원장), 주순옥(강반석혁명학원 원장) 등
 - 경축대회 참가자들, 만경대 방문(10.13) 및 대성산혁명열사능·조선인민군 무장장비관(10.14) 참관(10.14,중통·평방)
 - 또한 인민극장·평양교예극장·4.25문화회관에서 국립교향악단과 국립교예단, 혁명학원예술소조원들의 공연도 관람

■ 기타 (대내 정치)

- '黨 창건' 67돌 관련 김영남·최영림 등 黨과 국가 책임일꾼 등, 10.10 '금수산태양궁전' 참배(10.10,중통·중방)
 - 만수대언덕 및 전국 각지 김일성 父子 동상에 인민군·주민 등 참배(10.10,중통)
- '黨 창건'(10.10) 67돌 경축 모란봉악단공연(향도의 당을 우러러 부르는 노래), 10.10 김정은 黨 제1비서 등 참가下 평양에서 진행(10.11,중통·중방)
 - 김경희, 장성택, 박도춘, 김기남, 현철해, 김원홍, 김평해, 문경덕, 조연준 등



나. 경제

- **北, 배급제 폐지 실험…독립경영 외투기업 권장(10/14, 연합뉴스)**
 - 중국의 한 대북 소식통은 14일 "북한이 이달부터 소수의 국영기업에서 근로자들에게 배급을 중단하고 과거의 명목뿐인 저임이 아닌 월 200~300위안(3만6천~5만4천원)의 실질 임금을 지급하는 일종의 '실험'을 시작했다"고 밝힘.
 - 북한 당국은 올해 말까지 3개월 간 시범 운영을 거쳐 성과를 지켜본 뒤 대상을 점차 확대하고 내년에는 일부 기업의 임금을 최대 월 800위안(14만4천원)까지 올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이 소식통은 전함.

다. 군사

- **올 3월 김정은 시찰한 판문점 '통일각' 불났다(10/12, 연합뉴스)**
 - 올해 3월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시찰했던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연합뉴스가 12일 보도함.
 - 북한은 통일각의 내부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며 군 관계자는 "북한군 병사 1명이 상관을 살해하고 경의선 남북관리구역으로 귀순한 사건이 발생한 이후 통일각에서 불이 났다"면서 "서부전선 일대의 북한군 기강이 해이해진 것 같다"고 말함.
 - 정부의 한 소식통은 12일 "지난 7일께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면서 "건물 1층이 1시간가량 불에 탔다"고 밝힘.

라. 사회·문화

- **김정은 시찰 北유선중앙연구소 준공(10/8, 조선중앙통신)**
 - 북한의 대표적 여성종합병원인 평양산원 내 유선중앙연구소 준공식이 8일 열렸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보도함.
 - 평양산원 유선중앙연구소는 북한 매체가 지난 7월1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건설 현장을 현지지도하고 올해 노동당 창건기념일(10월10일)까지 완공될 것을 기대했다고 밝힌 곳임.
 - 준공식에는 최영림 내각 총리, 최태복·문경덕 당비서 등이 참석했고 최창식 보건상은 준공사에서 "유선중앙연구소는 위대한 김정일 대원수님의 발기와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의 세심한 지도에 의해 솟아났다"고 전함.
- **北, '춘향전' 서커스로 제작해 공연(10/8, 조선중앙통신)**
 - 북한 국립교예단의 창작가와 배우들이 춘향전을 교예극(곡예극)으로 창작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8일 전함.
 - 춘향전은 그동안 북한에서 영화, 가극, 연극, 판소리 등으로 공연됐지만 서커스 형태로 만들어지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며, 이 통신은 이번 작품이 공중교예, 지상교예, 수중교예, 빙상교예, 요술 등 교예의



모든 요소를 극적으로 결합했고 "춘향과 몽룡 사이의 사랑관계를 형상화함으로써 봉건적 신분제도의 반동성과 조선 인민의 아름다운 윤리도덕을 예술적 화폭으로 잘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함.

- **北 만경대·강반석혁명학원에 김정일훈장(10/9, 조선중앙통신)**
 -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9일 정령으로 만경대혁명학원과 강반석혁명학원에 김정일훈장을 수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만경대혁명학원과 강반석혁명학원은 혁명 유가족의 자녀와 당·정 고위간부의 자녀에게 입학이 허용되는 북한의 대표적인 특수학교임.
 - 정령은 만경대혁명학원과 강반석혁명학원이 노동당의 유자녀 교육방침을 높이 받들고 최고사령관의 영군체계를 철저히 세웠으며 "백두산 3대 장군의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고 원아들을 주체혁명위업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키우는데 특출한 공헌을 했다"고 설명함.

- **北 만경대·대성산 등 놀이공원 잇따라 준공(10/9, 조선중앙통신)**
 - 북한 평양의 만경대유희장과 대성산유희장 등 놀이공원이 잇달아 완공돼 노동당 창건 67주년을 하루 앞둔 9일 준공식을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전함.
 - 이들 준공식에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최영림 내각 총리, 최룡해 인민군 총정치국장, 김기남·문경덕 당비서, 김용진 내각 부총리 등이 참석함.
 - 최룡해 총정치국장은 만경대유희장 준공사에서 "만경대유희장은 김정은 원수님의 정력적 영도와 혁명군대의 결사관철의 정신, 애국충정이 낳은 기념비적 창조물"이라고 강조함.

- **北 원격화상진료 200여개 지역 병원으로 확대(10/11, 미국의소리(VOA))**
 - 북한 내 원격화상진료 서비스가 203개 군지역으로 대폭 확대됐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세계보건기구(WHO) 평양사무소가 10월 발간한 소식지를 인용해 11일 보도함.
 - 이 소식지에 따르면 WHO와 북한 보건성이 협력해 지난달 말 현재 평양 산원과 김만유병원을 중심으로 9개 도의 인민병원, 203개 군 단위 병원에 대한 원격화상진료 체계를 구축했으며, 중앙의 의료전문기들은 이 시스템을 통해 지방에서는 치료하기 어렵거나 흔치 않은 증세를 원격 진단하고 치료에 대해 조언을 할 뿐 아니라 최신 의료기술과 연구성과에 대한 교육도 진행한다고 밝힘.

- **北, 올림픽금메달리스트에 '노력영웅' 칭호(10/11, 조선중앙통신)**
 - 지난 8월 폐막한 제30회 런던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북한 선수들이 '노력영웅' 칭호를 받았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1일 전함.
 - 이 통신은 11일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지난 9일 정령으로 런던올림픽에서 금메달을 수확한 여자유도 안금애, 남자역도 김은국(이상



4·25체육단), 여자역도 림정심(기관차체육단), 남자역도 엄윤철(압록강체육단) 등 선수 4명과 류주성 4·25체육단 유도감독에게 '노력영웅' 칭호와 낫 등이 새겨진 금메달, 국기훈장 제1급을 수여했다고 보도함.

- **北, 여전히 식량난 고위험 국가(10/12, 미국의소리(VOA))**
 - 영국의 한 위기관리 전문기업이 북한을 식량난 위험이 큰 국가 중 하나로 분류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2일 보도함.
 - 이에 따르면 영국 메이플크로프트사는 지난 10일 발표한 '식량안보 위험지수' 보고서에서 북한이 전 세계 196개국 가운데 35번째로 식량난 위험이 큰 나라로 분류했는데 북한이 지난해 19번째를 차지한 것과 비교하면 위험도가 다소 낮아진 것이라고 밝힘.

2. 대외관계

가. 일반

- **北中 무역 15%↑..대중 의존도 심화 가속(10/8, 연합뉴스)**
 - 북한과 중국간 무역 규모가 해마다 확대되는 가운데 북한의 대중 의존도도 갈수록 심화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연합뉴스가 8일 보도함.
 - 통일부가 이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북중 무역 규모는 35억4천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지난해 북중 무역규모는 56억2천만 달러로 전년의 34억6천만 달러보다 무려 62.4%나 급증했다고 전함.
 - 또한 중국 해관의 통계에 따르면 북한은 올해 들어 7월까지 중국으로부터 15만4천의 식량을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음.
- **北, 러시아에 과일·수산물 수출 계획(10/10,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이 조만간 과일과 수산물을 러시아에 수출할 예정이라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0일 보도함.
 - 이 통신은 북한이 러시아 연방 부라티야 자치공화국에 과일과 수산물을 수출하기 위한 예비 합의가 이미 이뤄졌다고 수산물 중에서는 꽃게, 생선알 등이 주를 이룰 것으로 알려졌다고 '러시아의 소리' 방송을 인용해 전함.
 - 이를 위해 북한 대표단이 다음 달 부라티야 자치공화국을 방문할 예정이며, 부라티야의 수도인 올란우데 시의 기업이 북한산 과일과 수산물을 판매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힘.
- **中 옌지·훈춘-北 나선 정기노선 버스 운행(10/10, 길림신문 등)**
 - 중국 연변(延邊)조선족자치주 옌지(延吉)시와 훈춘(琿春)시, 북한 나선시를 연결하는 정기노선 버스가 정식 운행에 들어갔다고 길림신문 등



- 현지 매체들이 10일 보도함.
- 신문은 이 노선을 중국 연변동북아여행객운수그룹과 지린위베얼(吉林宇別爾)운수그룹, 북한 나선시육해운수총회사와 나선시관광총회사 등 북·중 4개사가 공동 개발했다고 소개함.
 - 또한, 중국 측 기업들은 대당 300만위안(5억4천만원)가량의 고급버스 11대를 구입, 해당 노선에 투입했으며 성수기에는 1일 최다 12회를 운행할 계획이라고 밝힘.
- **獨·싱가포르 NGO, 내달 北서 나선개발 세미나(10/11, 자유아시아방송(RFA))**
- 독일과 싱가포르의 비정부기구(NGO)가 다음 달 북한에서 나선특구 개발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1일 보도함.
 - 독일의 한스자이델재단과 싱가포르의 조선익스체인지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세미나는 북한 관료와 경제인들이 참가한 가운데 나선특구의 도시계획과 발전방안 마련, 국제기준에 맞는 경제적·법적 기준 정비 등을 논의하게 되며, 세미나는 나선 특구 또는 평양에서 개최될 예정이라고 전함.
- **中, 백두산 北지역 연계 관광 추진(10/11, 중국신문사)**
- 북한과 중국이 공동으로 추진 중인 백두산(중국명 창바이산·長白山)의 북한 지역 관광 개발이 속도를 내고 있다고 중국 반관영 통신사인 중국신문사가 11일 보도함.
 - 이 신문사는 11일 창바이산관리위원회를 인용해 중국이 백두산의 북한 쪽 관광지에 현지 시찰단을 파견할 예정이며, 북·중 국경 관광객의 출국수속 관리 등 세부 사항에 대해서도 북한과 협상할 계획이라고 밝혀 백두산의 중국 쪽 지역과 북한 쪽 지역을 연계한 관광을 추진할 방침임을 시사했음.
- **북·중 종합박람회 단동서 내일 개막(10/11, 연합뉴스)**
- 북·중 접경도시인 중국 랴오닝(遼寧)성 단동(丹東)에서 12일 '2012 중·조(북한) 경제무역문화관광박람회'가 개막한다고 연합뉴스가 11일 보도함.
 - 랴오닝성 주최로 오는 16일까지 열리는 이번 박람회는 '우의·협작·발전'이라는 슬로건 아래 양국 상품 전시와 경제무역 상담, 공예품 전시, 문화예술 공연, 관광자원 전시·협작 상담 등이 진행되며, 북한에서는 100개 기업, 300명 규모의 경제무역단과 115명으로 구성된 문화예술단이 참가한다고 전함.
- **北 중앙통신 논평 "과거청산 없이 북일관계 없다"(10/11, 조선중앙통신)**
- 북한은 11일 일본이 과거에 아시아 다른 국가에 저지른 범죄를 청산하는



- 것이 북일관계의 기본이라고 강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전함.
- 이 통신은 이날 '조일관계의 기본은 과거 청산이다'는 제목의 논평에서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 등 일본 정치인들이 최근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과거 범죄에 대한 인정과 사죄, 배상을 회피하고 있다며 "과거 청산이 없는 조일관계(북일관계)란 도대체 있을 수 없다"고 밝힘.
 - 또한, "수상(총리)을 비롯한 일본 정객들이 국제무대에서 '과거사 문제의 포괄적 해결'을 떠들면서 마치 우리 때문에 조일관계가 풀리지 않는 듯이 여론을 내돌리는 것은 언어도단"이라며 "오늘 일본 반동지배층을 비롯한 극우세력들에게는 어지러운 과거를 청산하고 새출발을 하려는 의지가 조금도 없다"고 비난했다고 보도함.
- **네덜란드 정부대표단, 경협 논의차 내주 방북(10/12, 자유아시아방송(RFA))**
 - 네덜란드 정부 대표단이 북한과 경제협력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다음 주에 북한을 방문한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2일 보도함.
 - 네덜란드 정부 대표단이 경협 논의차 방북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네덜란드 외교부와 경제부 관료들로 이뤄진 대표단은 북한과 농산물 교역 확대 등을 논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 **北기업들, 中서 상품 홍보·투자 유치 구슬땀(10/13, 연합뉴스)**
 - 13일 중국 랴오닝(遼寧)성 단둥(丹東)에서 열린 '2012 중·조(북한) 경제무역문화관광박람회'에 참가한 북한 기업들은 중국 바이어와 일반 관람객을 상대로 열띤 홍보전을 펼쳤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북한은 중국과 처음 개최한 이번 종합박람회의 메인 행사인 상품전시회에 평양 소재 기업을 중심으로 100개사를 파견함.
 - 북한 기업인들은 중국 각지에서 온 바이어와 주말을 맞아 전시장을 찾은 시민들에게 회사 홍보물을 나눠주고 상품의 우수성을 선전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임.
 - **방북 日교도통신 대표단 귀국(10/13, 조선중앙통신)**
 - 지난 9일 북한에 도착했던 일본 교도통신사 대표단이 13일 귀국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앞서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2일 이시가와 사토시(石川颯) 사장 등 교도통신 대표단을 만나 일본인 납치 문제에 대해 "해결이 끝났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며 "납치문제를 논의하기 전에 (일본이) 조선인에게 저지른 죄를 반성해야 한다"고 말함.
 - 김정은 체제 들어 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 처음으로 응한 김영남 위원장은 지난 2002년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일본 총리가 평양에서 가진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평화선언을 "양국 관계 정상화를 위한 지침"이라고 규정함.



- **北만수대예술단, 중단등서 공연(10/13, 조선중앙통신)**
 - 북한의 대표적 예술단인 만수대예술단이 12일 중국 랴오닝(遼寧)성 단둥(丹東)에서 음악·무용 종합공연을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3일 보도함.
 - 중앙통신은 중국 측에서 동송건(董松根) 국제무역촉진위원회 부회장, 탄쥘진(譚作鈞) 랴오닝성 부성장, 류홍차이(劉洪才) 북한 주재 중국대사 등이 공연을 관람했고 북한 측에서도 홍길남 평안북도인민위원회 부위원장, 김광훈 심양 주재 북한총영사, 최은복 재중조선인총연합회 의장 등이 함께 공연을 봤다고 전함.

 - **올 1~8월 북미교역액 1천180만 불...작년의 6배(10/14, 미국의소리(VOA))**
 - 올들어 8월까지 미국과 북한 간 교역액이 1천180만 달러로 집계됐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미국 상무부의 무역통계 자료를 인용해 14일 보도함.
 - 이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미국과 북한 간 교역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200만 달러)의 약 6배인 1천180만 달러로 나타남.
 - 미국이 북한에 수출한 품목을 보면 '민간기구가 구호 또는 자선으로 제공한 지원 품목'이 1천140만 달러로 전체의 96% 이상을 차지했으며 북한의 미국에 대한 수출실적은 없었음.
- ※ 2012년 9월 기준 1달러 북한 원 환율: 6370~6500(원)



■ 기타 (대외 일반)

- '을미사변' 117주년(1895.10.8) 관련 "조선침략정책에 따라 계획되고 감행된 특대형 반민족적, 반국가적 범죄"라며 '과거범죄에 대한 사죄와 배상은 커녕 책임에서 한사코 벗어나보려고 교활하게 책동하고 있다'고 비난(10.8,중통·노동신문/과거 죄악을 반드시 결산할 것이다, 백년숙적 일제의 죄악을 고발하는 을미사변)
- 양형섭, 10.8 新任 駐北 나이지리아 대사(은위폐 알렉산더)와 담화(10.8,중통)
 - 北, 나이지리아 정부대표단 위해 연회 마련(10.8,중통)
 - 나이지리아 정부대표단(단장 : 비올라 온우릴리 외무성 국무상), 10.8 평양 도착(10.8,중통·중방)
- 【北 국방위 대변인 성명(10.9)】 '韓美 미사일지침' 개정 관련 '북침전쟁에 불을 지르려는 상전과 주구의 공모결탁의 산물'이라며 '일본과 꺾은 물론 美 본토까지 명중타격권에 넣고 있다'고 위협(10.9, 중통·중방·평방)
 - ① 미제침략자들을 소멸하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그 실현을 위해 끝까지 싸워 나갈 것, ② 南 괴뢰들이 북반부 전지역 타격을 노리고 있는 이상 그에 대응한 군사적 대비태세를 백방으로 강화할 것, ③ 세계 모든 나라 정부, 정당, 단체들에 미국의 전횡에 경각성을 높일 것 호소.
- 중앙통신사 논평(10.9), '美 무인기 공격으로 파키스탄에서 사상자가 발생(3,000여명 사망자 중 테러분자는 2%에 불과)하였다'며 '민간인 학살만행을 자행하는 미국의 야만성의 극치를 보여준다'고 비난(10.9,중통/희세의 살인원흉, 인권유린의 왕초)

3. 대남동향

가. 정치·군사

- 北 "새 미사일지침은 선제공격 선포" 연일 비난(10/10, 연합뉴스)
 - 북한이 한미 양국 간 탄도미사일 사거리 연장을 포함한 미사일 지침 개정 에 대해 연일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10일 보도함.
 -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10일 대변인 담화를 통해 "지금 괴뢰 호전광들은 북 지역의 그 어디든 '자유롭고 신속하게 타격할 수 있다'고 공공연히 췌치며(떠들며) 전쟁열에 들떠 있다"면서 "미사일 정책선언은 우리에게 대한 선제공격 선포이며 전면전의 도화선에 불을 달려는 노골적인 도발"이라고 비난했다고 전함.
- 北 "장거리미사일 발사해도 美는 할 말 없다" 위협(10/10, 연합뉴스)
 - 북한은 10일 외무성 대변인을 통해 미국이 미사일 발사를 자제해온 북



한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었다며 한미 양국의 새 미사일 지침을 또다시 비난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함.

-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담화에서 "미국은 장거리미사일 발사의 자제를 포함해 조선반도(한반도)와 지역의 정세 안정을 위한 모든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대화와 협상의 기초를 허물었다"고 주장하며, 이어 "지금까지 미국은 우리의 평화적인 위성발사도 탄도미사일기술을 이용한 것이기 때문에 막아야 한다고 억지를 부리면서 제재소동을 고취해왔지만 이제는 우리가 군사적 목적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단행해도 할 말이 없게 됐다"고 덧붙였다고 전함.

나. 경제·사회·문화

● 개성공단 北근로자 月평균임금 128달러(10/8, 연합뉴스)

- 개성공단에서 근무하는 북측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이 130달러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연합뉴스가 8일 보도함.
- 통일부가 8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올해 상반기 현재 128.3달러를 기록했으며, 2006년 68.1달러에서 2007년 71.0달러, 2008년 74.1달러, 2009년 80.3달러, 2010년 93.7달러, 지난해 109.3달러 등으로 꾸준히 상승했는데 이는 최근 6년 동안 최저임금이 연 5%씩 인상되고, 북측 근로자들의 평균 근무시간이 늘어나면서 수당이 인상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 남북불교도, 금강산에서 합동법회 봉행(종합(10/13, 조선중앙통신)

- 남북한 불교도가 13일 금강산 신계사에서 통일기원 합동법회를 봉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신계사 복원 5주년을 기념해 열린 이번 법회에서 대한불교조계종(조계종) 민족공동체 추진본부와 조선불교도연맹(조불련) 중앙위원회는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계승해 남북 사이의 전쟁위험을 제거하고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공동발원문을 채택함.

● 안중근의사 의거 103주년 남북공동행사 추진(10/14, 연합뉴스)

-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이사장 함세웅 신부)가 올해 안 의사의 '의거 103주년'을 맞아 북한에서의 공동행사를 추진 중인 것으로 14일 전해졌다고 연합뉴스가 밝힘.
- 통일부에 따르면 기념사업회 측은 한국 침략의 원흉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안 의사의 의거 103주년을 맞아 평양에서의 남북 공동 기념행사와 안 의사의 생가인 황해도 신천 청계동 탐방 등 이른바 '성지순례'를 추진하고 있음.
- 기념사업회 측은 이를 위해 지난달 중순 중국 베이징에서 장재언 조선종교인협회 회장 등 북측 인사들과 접촉해 공동행사 계획을 설명하고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짐.

■ 기타 (대남)

- 중앙통신사 논평(10.9), 우리정부의 '北 위협과 도발에 강력대응' 언급을 '통치위기 모면, 무장충돌을 유발해 보수정권 연장 구실을 마련하려는 행위'라고 비난 지속(10.9, 중통/위기탈출을 위한 북 도발설)
- 北 「조평통」 대변인 담화(10.10), 우리의 '미사일정책선언'은 "우리(北)에 대한 선제공격선포이자 전면전에 불을 달리는 노골적인 도발"이라며 "강력한 물리적 힘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 위협(10.10, 중통·중방)
- 北 외무성 대변인 담화(10.10),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은 '미국의 反北정책 산 증거, 무모한 선택'이라며 "우리(北)가 군사적 목적의 장거리미사일발사를 단행하여도 할 말이 없게 되었다"고 강경대응 입장 천명(10.10, 중통·평방)
- 장거리미사일발사의 자제를 포함하여 조선반도와 지역의 정세안정을 위한 모든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협상의 기초를 허물었음.

● 북한연구센터 제공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힐 前차관보 "중국, 북한 핵보유용인"(10/8, 연합뉴스)

- 미국의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차관보가 북한의 핵 보유를 중국이 용인했다고 밝혔다고 지지통신이 8일 보도함.
- 지지통신은 미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를 지낸 힐 전 차관보가 인터뷰에서 "중국은 북한이 핵보유국이 되는 것을 용인하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고 전함. 이는 북한의 핵 문제와 관련한 6자 회담의 파탄 책임이 북한뿐 아니라 중국에 있다고 비판한 것임.
- 힐 전 차관보는 "중국은 북한이 핵보유국이 되는 것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반대 등 뭔가 해야 한다고 생각지 않고 있는 것 같다"면서, 중국의 이런 대응이 "6자 회담의 큰 실패"를 불렀다고 불만을 표시함. 그는 "북한의 핵 보유가 중국의 장래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중국에 이해시켜야 한다."고 말함.
- 힐 전 차관보는 과거 조지 부시 정권에서 북한의 핵 문제를 포함한 동아시아 외교를 담당함.

● 임성남 방일, 17일 한미일 대북협의 참석(10/11, 연합뉴스)

- 북핵 6자회담 우리측 수석대표인 임성남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오는 17일 일본에서 개최되는 한·미·일 3자 고위급 협의 참석을 위해 오는 16~18일 일본을 방문한다고 외교통상부가 11일 밝힘.
- 이번 협의에는 미국의 글린 데이비스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일본의 스기야마 신스케(杉山晋輔)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도 참석함. 한미일 3국이 순번에 따라 개최해 온 3자 고위급 협의는 지난 1월 워싱턴과 5월 서울에 이어 이번에 일본 도쿄에서 열리게 됨. 3국은 지난 9월 유엔총회 기간중 개최된 한·미·일 3국 외교장관회담에서 논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반도 정세 평가를 포함한 북한 및 북핵 문제를 협의할 예정임.
- 정부 당국자는 "북한에 특별한 움직임이 있어서 개최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선거 등 중요한 정치 일정을 앞둔 3국이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공조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함. 데이비스 특별대표는 일본 방문 이후 18~20일 방한함. 한국 방문은 동북아 순방의 일환이며 방한 기간 중 임 본부장 등 정부 인사와 면담할 예정임. 그는 방한 후 중국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짐.



나. 미·북 관계

● 北, 미사일지침에 "美본토 北미사일 타격권" 위협(10/9, 연합뉴스)

- 북한은 9일 한미 양국이 한국군의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연장하는 내용으로 미사일 지침을 개정할 데 대해 "조선군대는 미국본토까지 명중 타격권에 넣고 있다"고 위협함.
- 북한 국방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조선의 원칙적 입장을 밝힌 성명'을 발표하고 "전략로켓군을 비롯한 조선의 백두산 혁명강군이 남조선 괴뢰들의 본거지뿐 아니라 신성한 우리 조국 땅을 강점하고 있는 미제침략군기지들은 물론 일본과 괌, 나아가 미국 본토까지 명중 타격권에 넣고 있다는 것을 숨기지 않는다고 강조했다"고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매체들이 보도함. 국방위 대변인은 새 미사일 지침이 발표된지 이틀 만에 나온 이 성명에서 "우리에게는 미국과 괴뢰들을 비롯한 온갖 추종세력들의 핵에는 핵으로, 미사일에는 미사일로 대응할 모든 준비가 다 돼 있다"고 주장함.
- 북한 평양시 강동군에 있는 전략로켓군은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이 지난 3월3일 시찰한 '전략로켓사령부'로 일각에서는 핵미사일을 관리하는 부대라는 설도 있음. 대변인은 또 "남조선 괴뢰들이 미사일에 의한 공화국 북반부 전 지역 타격을 노리고 있는 이상 우리 군대와 인민은 그에 대응한 군사적 대비태세를 백방으로 강화할 것"이라며 "이제 남은 것은 단호한 행동뿐이며 세상이 알지 못하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진짜 전쟁 맛을 보여줄 것"이라고 위협함. 국방위 대변인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오바마 미대통령은 우리와 평화롭게 지낼 수 있다는 입장을 공개한 바 있다"며 "그러나 현실은 우리에게 보낸 미국의 그 모든 메시지가 거짓이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덧붙임.
- 또 남한에 대해서도 "사대와 굴종에 체질화돼 상전의 침략야욕에 맹종하고 있는 남조선 괴뢰들도 더 이상 살아 숨 쉴 곳이 없게 될 것"이라고 위협함. 한미 양국은 최근 300km로 묶여 있는 한국군의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800km로 늘리고 550km 미사일에 대해서는 탄두중량을 1천kg으로, 300km 미사일은 탄두중량을 최대 2천kg까지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미사일 지침을 개정, 지난 7일 발표함.

● 올 1~8월 북미교역액 1천180만 불...작년의 6배(10/14, 연합뉴스)

- 올 들어 8월까지 미국과 북한 간 교역액이 1천180만 달러로 집계됐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미국 상무부의 무역통계 자료를 인용해 14일 보도함. 이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미국과 북한 간 교역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200만 달러)의 약 6배인 1천180만 달러로 나타남.
- 미국이 북한에 수출한 품목을 보면 '민간기구가 구호 또는 자선으로 제공한 지원 품목'이 1천140만 달러로 전체의 96% 이상을 차지함. 북한의 미국에 대한 수출실적은 없었음. VOA는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 6월 발표한 대북제재 행정명령에서 북한의 상품, 서비스, 기술 등의 수입을



전면 금지한 바 있다"며 "다만 인도적 물품이나 유엔의 인도적 노력을 지원하는 물품, 상무부 산업 안보국이 승인한 농산품과 의료장비 등은 수출 또는 재수출을 승인하고 있다"고 전함.

다. 중·북 관계

● 北中 무역 15%↑ ..대중 의존도 심화 가속(10/8, 연합뉴스)

- 북한과 중국 간 무역 규모가 해마다 확대되는 가운데 북한의 대중 의존도도 갈수록 심화하는 것으로 확인됨.
- 통일부가 8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북중 무역 규모는 35억4천만 달러를 기록함. 이는 지난해 동기의 30억9천만 달러보다 14.5% 증가한 수준임. 지난해 북중 무역규모는 56억2천만 달러로 전년의 34억6천만 달러보다 무려 62.4%나 급증함.
- 특히 최근 5년간 중국, 러시아, 태국, 일본 등 주요 국가별 대외무역에서 북한의 대중 의존도는 크게 심화됨. 이 기간 전체 무역규모 가운데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 67%에서 2008년 72.9%, 2009년 78.5%, 2010년 82.9%, 지난해 89.1% 등으로 급격히 증가함. 러시아와의 무역 규모도 2009년 6천168만 달러에서 2010년 1억1천57만 달러, 지난해 1억1천281만 달러 등으로 상승세를 타고 있음.
-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의존도 심화는 북핵 문제로 인한 국제사회의 제재와 천안함 폭침에 따른 5·24조치 등으로 남북 교류가 크게 위축된 데 따른 반작용으로 분석되고 있음.
- 또 중국 해관의 통계에 따르면 북한은 올해 들어 7월까지 중국으로부터 15만4천의 식량을 수입한 것으로 나타남. 중국으로부터 북한의 식량수입은 2008년 15만5천, 2009년 20만3천, 2010년 31만4천, 지난해 38만 등임. 정부는 감량배급 기준(성인노동자의 경우 700g→546g)으로 북한은 매년 100만t 이상의 식량이 부족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음. 북한은 부족분 가운데 일부는 수입이나 외부 원조에 의존하고 있음.

라. 일·북 관계

● 日, 이달 北과 국장급 대화 추진(10/9, 연합뉴스)

- 일본 정부가 이달 중 북한과 국장급 대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산케이신문이 9일 보도함. 이 신문에 의하면 일본 정부는 중국 주재 일본대사관과 북한대사관을 채널로 이달 중 베이징에서 국장급 협의를 하는 방안을 북한과 조율하고 있음. 국장급 대화가 성사될 경우 일본은 스기야마 신스케(杉山晋輔) 아시아대양주 국장이 참석할 방침임.
- 일본은 북한과 지난 8월 하순 베이징에서 열린 과장급 협의에서 국장급으로 격을 높여 '가까운 시일 내에 쌍방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에 대해 협의하기로 합의했으나 후속 대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음. 일본은 북일 평화선언 10주년인 지난달 17일 이전 국장급 대화를 추진했으나 북한이 거부함. 일본은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교착 상태에 빠진 일본인



납북자 문제 해결을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북한은 "해결이 끝났다"며 납북자 문제의 의제화에 응하지 않고 있음.

- 북한은 조기 총선 가능성 등 일본의 정국 흐름을 지켜보면서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정권과의 대화 지속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임.

● **北 김영남, 日에 납치문제 논의전 과거청산 요구(10/12, 연합뉴스)**

- 북한의 2인자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일본에 납북자 문제를 논의하기에 앞서 과거 청산을 요구했다고 교도통신이 12일 보도함.
- 김 상임위원장은 이날 교도통신과 인터뷰에서 "납치문제를 논의하기 전에 조선인에게 저지른 죄를 반성해야 한다"고 말함. 그는 일본인 납북자 문제는 "해결이 끝났다"고 기존 주장을 되풀이함.
- 일본은 지난 8월 말 재개된 정부 간 협의를 통해 납북자 문제의 의제화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북한이 부정적이어서 전망이 불투명함. 김 상임위원장이 외국 언론의 취재에 응한 것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체제 출범 이후 처음임.
- 김 상임위원장은 고(故)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일본 총리의 2002년 평화선언을 "양국 관계 정상화를 위한 지침"이라고 규정함. 두 사람은 당시 국교정상화 교섭 재개, 일본 국민의 생명 및 안전관련 현안사항(납북자 문제)에 대한 북한의 재발방지 조치, 핵 문제의 포괄적 해결을 위한 국제 합의 준수와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동결 연장 등에 합의함.
- 김 상임위원장은 "일본이 시대착오의 (대북한) 적대정책을 버리고, 평화선언을 이행한다면 양국 관계에 새로운 장이 열릴 것"이라고 말함. 일본 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 당국이 과거의 범죄행위를 사죄하는 것이 아니라 납치 문제로 여론을 오도해 정권 유지의 카드로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함. 김정은 제1위원장의 통치와 관련해서는 "인민애(人民愛)의 정치를 하고 있다"면서 "새로운 경제 전략을 제시하고 국가의 전반 사업을 현명하게 이끌고 있다"고 평가함.

마. 러·북 관계

● **"러시아 정식 취업 北노동자는 2만 명"(10/9, 연합뉴스)**

- 올 상반기를 기준으로 러시아에서 정식 취업 허가를 받고 일하는 북한 노동자 수가 모두 2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짐. 러시아 연방이민국이 지난달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러시아에 2만 명의 노동자를 파견한 것으로 집계돼 옛 소련 국가를 제외하면 중국(7만6천명), 터키(2만2천500명)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규모를 기록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9일 전함.
- 북한 노동자들은 러시아 극동지역을 중심으로 주로 벌목, 농업, 건설 분야에 진출해 있으며 그 규모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현재 러시아 아무르 주에서는 벌목 등 임업 분야에 1천500명, 건설 분야에



800명의 북한 노동자가 일하는 것으로 알려짐.

- 북한과 러시아 정부는 지난 5일 재외파견 노동자의 노동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실무그룹 회의를 평양에서 열고 의정서를 조인한 바 있음. 러시아에 가장 많은 노동자를 파견한 나라는 우즈베키스탄으로 39만5천명이었고, 이어 타지키스탄(15만 명), 우크라이나(10만5천명) 등의 순이었음.

● "北, 러시아에 과일·수산물 수출 계획"(10/10, SBS)

- 북한이 조만간 과일과 수산물을 러시아에 수출할 예정이라고 자유아시아 방송이 보도함. 이 방송은 '러시아의 소리' 방송을 인용해, 북한이 러시아 연방 부랴티야 자치공화국에 과일과 수산물을 수출하기 위한 예비 합의가 이뤄졌다고 하며, 꽃게와 생선알 등이 주로 수출될 것이라고 전함.
- 북한 대표단은 이를 위해 다음달 부랴티야 자치공화국을 방문할 예정이며, 부랴티야의 수도인 올란우데 시의 기업이 북한산 과일과 수산물을 판매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짐. 북한과 러시아의 교역은 최근 몇 년 사이 급증했으며, 양국 간 무역 규모는 지난 2009년 6천 168만 달러에서 2010년 1억 천 57만 달러로 증가함.

바. 기 타

● 합참의장 "전시 北 핵사용 징후시 선제타격"(10/8, 연합뉴스)

- 정승조 합참의장은 8일 "전시에 북한의 핵사용 임박 징후가 포착되면 선제타격까지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힘. 정 의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의 합동참모본부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 답변에서 "북한 핵에 대해 어떤 군사대비책을 갖고 있느냐"는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함.
- 정 의장이 선제타격의 범위를 '전시'로 한정했지만 이번 발언은 북한 핵에 대한 우리 군의 강력한 대응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됨. 이에 대해 북한은 강력히 비난할 것으로 예상됨. 정 의장은 또 새로 개정된 미사일 지침과 관련, "합참 입장에서는 남부에서 북한 전역을 사정권에 넣게 되어 만족한다."면서 "개정된 지침은 우리가 (군사적으로) 대응하는데 유효성이 있다"고 평가함.
- 그는 미사일지침 개정에 따른 새로운 미사일 전력의 개발·배치 시기를 묻는 질문에 "관련 연구기관에서 기술 연구를 해왔고 어떤 부분에서는 기술 축적이 되어 있다"면서 "기존 현무-2 탄도미사일을 양산하면서 사거리 규제에 묶여 전력화하지 못한 것은 추가로 전력화할 계획"이라고 밝힘.

● 북한군 귀순자 "상관폭행..보복 두려워 탈영"(10/12, 연합뉴스)

- 강원도 고성군 최전방 소초로 귀순한 북한군 병사는 상관을 폭행한 뒤 보복이 두려워 탈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됨.



- 국회 국방위원회 유승민 위원장을 비롯한 7명의 여야 의원들은 12일 오후 북한군이 귀순한 고성군 22사단 소초를 방문해 류제승 8군단장, 조성직 22사단장, 부대 헌병대 관계자 등으로부터 당시 군의 경계태세와 소초의 CCTV(폐쇄회로) 녹화 여부, 철책 월책 상황 등을 보고받음. 22사단의 조성직 사단장(소장)은 북한군 귀순자(병사)는 상관을 폭행해 보복이 두려워 지난달 29일 새벽 부대 경계근무 중 탈영한 것으로 진술했다고 현장을 방문한 민주통합당 김진표 의원이 밝힘.
- 조 소장은 "이 병사는 2일 오후 11시15분 우리 군 소초의 창문을 노크했고 이를 소초안에 있던 송모 하사가 들었다"면서 "송 하사는 소초장과 밖으로 나가 5~6m 앞에 있던 이 병사의 신병을 확보, 소초상황실 의자에 앉혀놓고 상황보고를 작성했다"고 설명함. 당시 소초의 상황일지에는 오후 11시19분 신병확보, 11시20분 고속상황전파체계로 보고, 11시21분26초에 전파라고 적혀 있다고 조 소장은 말함. 이 부대 헌병대 관계자는 "소초에 설치된 CCTV 하드를 가지고 전문과학수사팀이 수사한 결과, 2일 오후 7시26분부터 3일 오전 1시8분까지 녹화가 되지 않았다"면서 "지운 흔적은 없었다."고 강조함.
- 조 소장은 '북한군 병사가 남한 땅에 넘어와서 소초까지 이동한 거리는 얼마나 되느냐는 질문에 "(남측에서 배회한 거리가) 150~200m 정도 된다. 길로 걸어왔다"면서 "그러나 이동로를 볼 수 있는 장비는 없다"고 설명함. 그는 "북한군 병사(신장 160cm·몸무게 40~50kg)보다 10cm 크고 몸무게가 10kg이 더 나가는 우리 병사를 데려다가 철책을 넘어보도록 실험했다"면서 "처음 할 때는 4분 걸렸는데 두 번, 세 번 하니까 1분대 이하로 걸렸다"고 말함. 조 소장은 "우리 병사를 데리고 중책(중간 철책), 남책(남쪽 철책) 2개 철책에서 넘는 실험을 했는데 중책은 52초, 남책은 1분1초가 소요됐다"면서 "전반적으로 철책 3개를 넘는데 그리 긴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함.

2. 주변국 관련

가. 한·미 관계

- <정부, 미사일지침 폐기 않고 개정한 이유는>(10/8, 연합뉴스)
 - 정부가 한미 미사일 지침을 2년여 간의 협상 끝에 어렵게 개정한 이유는 무엇일까. 미사일 지침은 1979년 처음 만들어졌을 때부터 현재까지 '주권 제약 소지가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음. 미사일 지침은 우리의 일방적인 자율규제 선언이지 법적 구속력은 없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폐기를 통보할 경우 무효화할 수 있음. 절차적으로는 정부가 폐기 방침을 통보하면 6개월 후 무효가 됨.
 - 이번 지침 개정 과정에서 한미 간 이견으로 협상이 난관에 봉착하자 군을 비롯한 정부 안팎에서는 "미국이 이처럼 사거리 연장에 소극적이라



면 차라리 폐기하자"는 강경론도 대두됐던 것으로 알려짐. 이 때문에 미국을 어떻게든 설득하지는 협상론과 폐기도 불사하지는 강경론이 팽팽하게 맞섰던 경우도 있었다고 정부의 한 소식통은 전함.

- 원론적으로는 폐기도 가능한 미사일 지침을 개정하는 데 정부가 공을 들인 것은 대북 억지를 위한 한미 연합방위력을 유지하고 한미동맹을 비롯한 한미관계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했기 때문으로 보임.
- 정부 당국자는 8일 "미사일 지침은 될 수 있으면 일방적으로 깨는 것보다는 한미가 동맹관계이기 때문에 유지해 나가는 것이 좋다"면서 "미사일 사거리 하나만 늘어난다고 해서 모든 분야의 군사력이 신장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함. 이 당국자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한미 연합 방위력이 함께 갖춰져야 하는 것"이라면서 "연합방위능력에는 미군의 정보정찰, 감시능력 등 우리의 방위력을 보완해 주는 부분을 무시할 수 없다"고 말함. 우리가 미사일 지침을 폐기했을 경우 미국이 미사일 기술 협조 등을 제한할 수 있고 미국과의 불협화음이 북한에 부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는 점도 지침 폐기보다는 개정 쪽으로 무게를 싣게 된 요인이라는 분석임.

나. 한·중 관계

- (중국)외교부, 한반도 군사대립 격화되지 않길 희망해(10/9, 인민일보)
 - 2012년 10월 8일, 홍레이(洪磊) 외교부 대변인은 연례브리핑을 가짐.
 - 한국정부는 10월 7일, 한미 양측은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에 대해 합의를 보고 한국의 탄도미사일 최대 사정거리를 현 300km에서 800km로 확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는데 중국은 이를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홍 대변인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며 대규모살상무기 확산을 방지하는 것은 각측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자 각측이 지켜야 할 의무 및 책임이라고 밝힘.
 - 또한 홍대변인은 중국은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자고 줄곧 주장해 왔고, 한반도의 군사적 대립이 더욱 심각해지지 않길 바라며, 각측이 한반도 문제 완화를 위해 더욱 힘쓰고 또 실질적인 노력을 하길 바란다고 덧붙임.

다. 한·일 관계

- 노다 "한일, 대국적 관점에서 냉정 대응해야"(10/8, 연합뉴스)
 -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는 8일 독도·과거사를 둘러싼 한일 간의 외교 갈등과 관련, "일한 양국은 대국적인 관점에서 냉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생각에 입각해 안정적인 관계 구축을 향해 노력하겠다"고 밝힘. 노다 총리는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제48차 한일·일한 협력위원회 합동총회에서 무토 마사토시(武藤正敏) 주한 일본 대사가 대독한 축사를 통해 "일한 양국 간에는 입장이 다른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서 이같이 말함.



- 그는 "북한 문제를 포함한 현재의 동북아 정세를 생각할 때 미국의 동맹국인 일한, 일·한·미의 연대는 동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전의 축이 되며 이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함. 그는 "경제 분야에서 일한 양국은 좋은 경쟁자이면서 글로벌 비즈니스에서는 협력을 서로 심화시키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일본의 강점과 한국의 강점을 살려 지역·국제 경제에서 양국의 연대를 강화시켜 나가고자 한다."고 강조함.
 -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郎) 외무상은 와타나베 히데오(渡邊秀央) 협력위 일본 측 부회장이 대독한 축사에서 "일한 양국 간에는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 지금까지의 관계를 뒤엎는 일은 쌍방에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말함. 그는 "일한 양국은 국제사회에서 아시아의 양대 선진국으로 여겨지며 그에 상응한 언행을 취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밝힘.
 - 이에 앞서 이명박 대통령은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대독한 축사에서 "역사를 직시하는 용기와 지혜,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진정성 있는 행동으로 한일 양국 간 성숙한 동반자 관계의 발전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함.
 - 한편 이날 협력위 합동총회에서는 '동북아시아의 안전보장과 경제협력'을 주제로 100여명의 참석자들이 정치·경제 분야 등으로 나뉘어 기조발제와 토론을 진행함. 일본에서는 아소 다로(麻生太郎) 전 일본 총리, 나카소네 히로후미(中曾根弘文) 자민당 참의원 의원 등 정치·경제인 20여명이 참석함. 한일협력위원회는 한일 간 우의를 다지기 위한 양국 정치인과 기업인 등의 모임으로 한국은 남덕우 전 총리, 일본은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曾根康弘) 전 총리가 각각 회장을 맡고 있음.
- **고노의 반격 "위안부 담화 반복하면 일본 신용 타격"(10/9, 중앙일보)**
- 1993년 '고노 담화'를 직접 발표했던 고노 요헤이(河野洋平·75) 전 일본 관방장관이 8일 최근 일본 정치권에서 분출되는 고노 담화 폐지 또는 수정론에 대해 "일본의 인권 의식이 의심받고 국가 신용을 잃게 될 수도 있다"고 경고함. 당시 담화에서 일본 정부는 "위안소 설치·관리와 위안부 이송에 구 일본군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했고, 감언·강압 등에 의해 본인의 의사에 반해 모집된 사례가 많았다"고 인정한 뒤 사죄함.
 - 고노 전 장관은 8일자 요미우리(讀賣)신문의 연재물 '시대의 증언자'에 게재된 인터뷰에서 "고노 담화는 한국과 일본뿐 아니라 미국의 국립공문서관 등의 자료까지 신중하게 검토해 당시 미야자와 기이치(宮澤喜一) 내각의 책임으로 결정한 내각의 의지"라고 규정함. 그는 이어 "고노 담화를 각의에서 결정한 것은 아니지만, 이후 모든 자민당 정권과 민주당 정권에서 답습해 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서상의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전후 반세기를 넘어 현재까지도 고통을 겪고 있는 여성들의 존재, 또 전쟁 중의 비극까지 없었던 것처럼 주장하는 데 슬픔까지 느끼게 된다"고 꼬집음. 그러면서 "아시아뿐만 아니라 미국과 유럽 각국으로부터 일본의 인권의식이 의심을 받고 국가의 신용을 잃게 될지 모른다."



고 경고함.

- 고노 전 장관은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 관련 대목이 담화에 포함된 경우도 자세히 설명함. 그는 "출처와 내용을 공표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16명의 위안부에게서 직접 청취한 결과 일본군이 여성을 위협해 연행했고, (여성들은)공장에서 일하게 된다고 속았으며, 때로는 하루에 20명이 넘는 병사들을 상대해야 했고, 일본군이 패주할 때 버려졌다는 참혹한 체험을 들었다"고 밝힘. 이어 "(위안부들이) 일본군에 거역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강제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위안부들의 증언 내용을 본 미야자와 총리도 충격을 받았다"고 회고함.
- 지난 8월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을 계기로 일본 정치권에서 고노 담화 폐지·수정론이 제기된 이후 고노 전 장관이 직접 나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임. "강제연행의 증거가 없다"며 담화 훼손을 시도하는 우익 정치인들을 향한 '고노의 반격'인 셈임.
- 현재 고노 담화 폐지나 수정에 가장 적극적인 인물은 지난달 말 자민당 총재에 선출된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임. 그는 총재선거전 내내 "위안부 강제연행의 증거가 없는 만큼 우리 자손들에게 불명예의 짐을 지게 해선 안 된다"며 고노 담화 폐지를 대표적 정책과제로 내걸었음. 자민당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압도하는 현 상황에서, 차기 총선 뒤 그가 총리에 등극하면 고노 담화 폐지가 일본 정부의 공식입장이 될 가능성도 있음.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현 총리, 망언제조기로 알려진 80세의 이시하라 신타로(石原慎太) 도쿄도지사, 또 일본 정치의 차세대 기대주라는 43세의 하시모토 도루(橋下徹) 오사카 시장 등이 연령대를 불문하고 위안부 망언 대열에서 발을 맞추고 있음.

● <한일조약문서' 공개 판결..판도라 상자 열리나>(10/11, 연합뉴스)

- 일본은 한국 정부가 2005년 8월 1965년 한일기본조약과 관련된 한국 측 문서를 전면 공개한 뒤에도 자국의 문서를 공개하지 않음.
- 요시자와 후미토시(吉澤文壽) 니가타 국제정보대학 준교수를 중심으로 한 일본 교수, 변호사 등이 그해 말 '한일회담 문서 전면공개를 요구하는 모임'을 결성하게 된 배경이었음. 이들은 "한국은 전면 공개했으니 일본도 전면 공개하라"고 일본 정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 한일조약과 관련된 일본 측 문서는 모두 6만 쪽. 일본 정부는 이 같은 압력에 밀려 일본 측 문서를 공개했지만 25%는 아예 공개하지 않거나 주요 부분에 먹칠을 한 뒤 공개함. 일본 정부는 당시 비공개 사유로 "향후 대(對) 북한 교섭에서 불리해질 우려가 있다"거나 "한국과의 신뢰관계를 해칠 우려가 있다", "독도와 관련된 교섭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음. 앞으로 북일 국교정상화 교섭이나 한국과의 독도 교섭이 남아 있는 만큼 내부 논의를 공개하기 싫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짐. 일본 정부는 이들 25%의 문서를 2006년 8월과 2007년 11월, 2008년 4~5월 3차례로 나눠 비공개 처분함. 이에 따라 일본 교수·변호사



가 중심이 된 시민단체와 한국 측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도 3차례에 걸쳐 비공개 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함.

- 결과는 1차 소송은 원고 승소, 2차 소송은 원고 패소로 나타남. 1차 소송의 경우 일본 정부가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했다가 도중에 소 취하 결정을 내리면서 일부 문서의 공개로 이어짐. 이때 공개된 서류에는 일본 외무성이 1965년에 작성한 '한일청구권 협정 체결 후에도 개인청구권은 유효하다. 청구권협정과 개인청구권은 무관하다'는 내용의 내부 문서도 포함돼 있었음. 즉 일본이 청구권협정에는 '개인의 청구권 문제 등은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적어놓았지만 내부 문서에는 '청구권 협정의 의미는 국가의 외교보호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것일 뿐 국민의 재산(개인청구권)으로 국가의 채무를 충당한 것은 아니다'라고 명시한 사실이 이 때 드러남. 한국 측을 상대로는 개인청구권 소멸을 주장하면서도 자국민을 상대로는 "개인청구권을 제멋대로 소멸시켰다"는 비난을 받고 싶지 않았던 일본 정부의 속내가 드러난 셈임.
- 3차 소송 결과로 어떤 문서가 공개될지는 아직 알 수 없음. 그러나 3차 소송이 1, 2차 소송과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압도적으로 분량이 많다는 점에서 북한과 독도 문제 등에 관해 파괴력을 지닌 사실이 밝혀질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임. 원고 측 관계자는 "일본은 6만 쪽 중 25%를 비공개하거나 일부를 먹칠한 뒤 공개했다"며 "이 가운데 1차 소송 대상이 1%, 2차 소송 대상이 1%라면 나머지 23%가 3차 소송 대상"이라고 말함. 일본 정부의 비공개 사유로 볼 때 3차 소송 대상에는 청구권협정, 독도, 북한 등과 관련된 문서가 다수 포함된 것으로 보임. 1차 소송 결과 '청구권협정과 개인청구권은 무관하다'는 외무성 내부 문서가 공개된 것처럼 3차 소송에서도 독도, 북한 등과 관련된 일본 정부의 내부 문서가 공개될 경우 양국 관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점은 분명함.
- 특히 독도 관련 문서는 한일 관계에서 '양날의 칼'이 될 가능성도 있다. 당시 한국이나 일본의 제안 중 어느 한쪽에 크게 불리한 내용이 섞여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임. 원고 중 한명인 최봉태 변호사는 "앞으로 일본이 한일조약 이후에 국제사법재판소 얘기를 수십 년간 꺼내지 못한 이유가 공개될 수도 있다"고 기대했음. 일본 외무성은 1심 판결을 받아 들여 곧바로 해당 문서를 공개할 수도 있고, 2주로 정해진 시한 내에 항소할 수도 있음. 일본측이 항소할 경우에는 상당한 시일이 흐른 뒤에나 이미 전면 공개된 한국 측 문서와 일본 측 비공개 문서를 비교해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정부, 내년 세계지도 동해·독도표기 전수조사(10/12, 연합뉴스)

- 일본정부가 내년에 전 세계 주요 지도의 동해·독도 표기 현황을 전수 조사함. 동해 표기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전수조사는 2009년 이후 처음임.
- 정부 관계자는 12일 "동해와 독도에 대한 정부 정책의 성과를 점검하고



앞으로의 대응 전략을 짜기 위해 전 세계 지도에서의 표기 현황을 내년 중 전수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힘. 전수조사는 외교통상부가 재외공관을 통해 주요국의 지도를 입수해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됨. 현재도 각 공관에서 주재국 지도의 표기 현황을 수시로 보고하고 있지만, 전수조사는 조사 대상과 기간을 특정해 집중적으로 이뤄지는 공식적인 조사라는 점에서 공관의 일상적인 점검과는 차이가 있음.

- 전수조사의 주요 관심 대상은 개발도상국의 지도 제작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에 소재한 지도제작사가 만든 지도임. 동해와 독도를 한 번에 조사할지 별도로 조사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음. 동해와 달리 독도는 섬 규모상 지명 자체가 표기가 안 된 지도가 많다는 이유에서임.
- 정부는 동해의 경우에는 2007년과 2009년에 각각 전수조사를 한 바 있음. 2009년 72개국 944건의 지도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동해를 단독 표기하거나 병기한 사례가 전체의 28.7%를 차지함. 이는 75개국 353개 지도를 대상으로 한 2007년 조사(23.8%)보다 다소 증가한 수치임. 일본 외무성이 2000년 실시한 조사에서 동해가 표기된 경우는 2.8%에 그침.
- 동해와 달리 독도는 이번이 첫 공식적인 조사임. 정부는 2008년 미국 지명위원회의 독도 표기 파문시 전 세계 지도의 독도 표기 현황을 조사하고 오류를 시정하는 활동을 전개함. 그러나 이는 각 공관이 자체적으로 주재국의 현황을 파악하고 대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짐. 내년 조사는 정부의 독도대책반이 중심이 돼 진행됨. 조사를 위한 별도 예산도 편성된 것으로 전해짐.

● **타케시마 단독 제소 방침 변함없어, 후지무라 관방장관 "조용하게 준비" (10/12, 산케이신문)**

- 후지무라 오사무 관방장관은 12일 오전의 기자 회견에서, 시마네현·타케시마의 영유권 문제를 둘러싼 국제사법재판소에의 단독 제소에 관하여 "정부 방침은 변함없다. 조용하게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강조함.
- 키라주사외무 부대신이 11일의 기자 회견에서 "단독 제소가 좋은 것인지, 지금부터 검토해보아야 할 것."이라고 정부 방침과 어긋나는 발언을 했던 것에 대해 "그는 단지 자신의 생각을 말했을지도 모른다."라고 지적하는데 그침.

라. 미·중 관계

● **中 "美측은 中日영유권 분쟁 관련 약속 준행하길" (10/9, 인민일보)**

- (중국)외교부 대변인은 8일 연례브리핑을 통해 미국이 중일 영유권 분쟁에서 어떠한 입장도 취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이를 준행하길 바란다고 전함.



- 최근 미국 국회보고에서 일본의 다오위다오(釣魚島)에 대한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힌 보도에 대한 중국정부의 입장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대변인은 "미국 측은 중일 영유권 분쟁에서 어떠한 입장도 취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이를 준행하기 바란다."고 답변함. 더불어 "시급한 문제는 일본이 현실을 직시하고 잘못을 반성하여 대화를 통한 분쟁해결 궤도로 돌아와야 하는 일이다."라고 언급함.

● **상무부, 美측 中태양광패널 덤핑 판결에 불만 표해(10/12, 인민일보)**

- 10일 선단양(沈丹陽) 상무부 대변인은 미국의 중국 태양광 패널제품에 대한 반덤핑 반보조금 조사 최종판결에 대해 담화를 발표함. 선 대변인은 담화에서 "미 상무부는 중국정부와 중국기업의 합리적인 항변을 무시하고 중국산 태양광 패널제품에 대해 불공정한 과세조치를 취하였다. 중국 측은 이 판결에 대해 강력한 불만을 표시한다"라고 밝힘.
- 10월 10일 미국 상무부는 중국산 태양광 패널제품에 대해 14.78%~15.97%의 반보조금세와 18.32%~249.96%의 반덤핑세를 부과한다고 판결내림. 구체적인 제품으로는 중국산 결정 질 실리콘 태양광 패널, 모듈, 적층판, 안반, 건축에 쓰이는 단일화 재료 등이다. 미국은 중국산 태양광 패널제품에 최고 249.96%에 달하는 고액의 반덤핑·반보조금 관세를 판결함.
- 선단양 대변인은 "미국은 신에너지 분야에서 무역마찰을 일으키고 전 세계를 향해 무역보호주의와 신에너지 발전을 방해하는 소극적인 제스처를 취하였다. 이는 전 세계가 기후변화와 에너지 안보 도전에 공동 대응하자는 취지에 상반되는 것이자 G20 회의에서 신보호무역주의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약속에 위배되는 것이다. 실제로 중국과 미국은 청정에너지 분야에서 밀접한 협력을 통해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다. 중국 태양광 패널제품에 반덤핑·반보조금세를 징수하는 것은 미국의 원자재와 설비수출 그리고 미국 소비자의 이익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라고 밝힘.
- 또한, 선단양 대변인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양국 기업 간의 협력이 날이 갈수록 긴밀해지고 있다. 미국 측은 이 같은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아 중국 태양광 패널제품에 대한 무역구제조치를 가능한 빨리 중지하고 중미 양국의 산업교류와 협력을 지지하여 신에너지와 친환경 경제발전을 촉진하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임.

마. 미·일 관계

● **다음달 자위대와 미군, 오키나와 주변 군소섬 방위 훈련 (10/13, 산케이신문)**

- 일·미 양국 정부는 12일, 다음 달의 일·미 공동 통합 연습(실제노동 연습)으로, 오키나와현의 무인도를 사용해 자위대와 미군의 크고 작은 섬들의 방위 훈련을 실시할 방침을 굳힘. 사실상의 낙도 탈환 훈련으로,



국내의 낙도에서의 공동 탈환 훈련은 처음 실시되는 것임. 중국에 의한 낙도 침공의 위협이 높아지는 중, 사태가 일어나는 위험성의 높은 오키나와에서의 훈련이 불가결이라고 판단함. 훈련을 통해 일·미 공동 대처 능력을 높여 오키나와현·센카쿠 제도를 둘러싸고 고압 자세를 강하게 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는 목적이 있음.

- 공동 통합 연습은 11 월 초부터 중순에 걸쳐 큐슈·미나미니시카타면을 중심으로 전국 각지에서 실시됨. 일본 측은 육해공 3 자위대, 미국 측은 육해공군과 해병대가 참가함. 주요한 훈련은 크고 작은 섬들 방위를 포함한 해상·항공 작전과 탄도 미사일 대처, 통합 수송이 될 전망으로, 부대나 함정, 항공기가 각 기지와 바다 공역에서 훈련을 전개함.
- 섬이 적에게 점거되었다는 시나리오로 실시됨. 육상 자위대와 미 해병대는 9월, 미 괌섬이나 테니안섬에서 낙도 탈환 훈련을 실시함. 섬을 사용한 공동 훈련은 그것이 처음이었지만, 이번은 무대를 오키나와로 옮겨, 센카쿠나 사키시마 열도에서의 사태를 염두에 부대의 전개 방법도 확인할 것임.
- 방위성은 훈련에 해당해 "특정의 나라나 섬을 상정하고 있지 않다"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중국의 반발이 예상됨. 센카쿠의 국유화를 둘러싸고 일중간의 대립도 급증했기 때문에, 방위성은 노다 요시히코 수상의 판단을 기다리는 이례적인 조치를 취함. 수상은 최종적으로 크고 작은 섬들 방위 훈련을 포함 연습 내용을 승낙함. 방위 훈련의 실시에 관한 신중론역시 존재하여, 훈련을 비공개로 하는 일도 검토하고 있지만, 한 정 부고위관료는 "위협에 맞은 상식적인 훈련으로서 담담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음.

바. 미·러 관계

- 러시아, 미국과의 군사조약 갱신하지 않을 것(10/10, 로이터 통신)
 - 러시아는 수십 년간 유지되어 오던 워싱턴과의 핵무기와 화학무기 해체에 관한 조약을 만기 일 년을 앞두고 연장하지 않을 것이라고 수요일 외교부 대리인인 세르게이 라브코브가 언급함.
 - 두 번이나 연장된 1991년의 조약의 폐기는 미국과의 러시아의 최근의 관계의 걸림돌의 연장선으로 보임. 또한 냉전 이후 복구된 두 국가의 관계의 미래에 대한 의구심의 증폭을 일으키고 있음. "프로그램의 기반은 1991년의 조약을 기본으로 합니다. 조약이 성립될 당시의 상황과 준비 과정을 고려한다면 매우 높은 기대치에는 미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새로운 현실적인 상황들을 감안한다면 이 조약은 우리를 만족시키지를 못하였습니다."라고 인터팩스가 그의 말을 인용함.
 - 베테랑 군비축소 캠페인 전문가인 미국 상원의원 리처드 루저는 지난 8월 모스크바에 머무르며 프로그램의 갱신을 위해 노력했음. 이 프로그램은 그가 프로그램 설립에 참여한 이유로 눈-루저의 협력적 위협경감 프로그램으로서 알려져 있음. 이 프로젝트는 소비에트 연방의 핵 과 화



학무기의 해제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2006년에 마지막으로 러시아 국회에서 비준이 되었으며 2013년 조약의 만기를 앞두고 있음. 러시아 군대의 참모진은 7,650개 이상의 전략적 탄두를 비활성화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언급함.

- 라브코브는 러시아는 이제 독자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할 만큼의 자금을 마련하였으며 모스크바는 제3의 국가와 파트너십을 구축하는데 관심이 있다고 말함. 루거의원은 모스크바에 머무르는 동안, 그는 러시아와 미국이 협력하여 시리아의 화학무기 보유량을 감축시킬 만한 아이디어를 구상해 내었다고 말했음에도 그의 의견에 대한 러시아의 반응은 냉담했다고 덧붙였다.
- 오바마 2008년에 집권을 시작한 이후로 워싱턴의 주도로 이루어진 2011년 2월을 기점으로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한 START 핵무기조약을 포함한 다수의 양자조약들은 미국과 러시아간의 새로운 기반을 마련해 내었음. 이 조약은 장거리 무기의 재고량을 낮추는데 일조하였음.
- 그러나 최근 이러한 두 국가 간의 관계는 러시아가 모스크바에 위치한 미국국제개발위원회의 사무실을 철거하기로 결정한 이후에 냉기류에 맞닥뜨리게 되었음.

사. 중·일 관계

● 中 인민일보 "다오위다오 순찰로 주권 수호"(10/8, 연합뉴스)

-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가 8일 "다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에 대한 어정선(漁政船·어업관리선)과 해양감시선의 순찰 활동을 지속해야 하며 일본이 이에 익숙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함.
- 인민일보는 국제문제와 관련해 공식적인 견해를 밝힐 때 쓰는 '중성(鐘聲)' 칼럼을 통해 이같이 주장함. 베이징 외교가에선 집권 공산당의 의지를 대변하는 인민일보의 이런 견해 표명은 센카쿠 순찰을 상시화하려는 중국의 의지를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음.
- 신문은 먼저 "다오위다오와 그 부속도서는 중국의 신성한 영토이기 때문에 지극히 정상적인 행위"라고 언급함. 이어 "중국 정부는 다오위다오 부근에서의 어선 보호와 다오위다오 주권 보호를 위해 2010년 어정선과 해양감시선의 순찰 의지를 천명했고 이를 지속해갈 것"이라고도 함. 신문은 아울러 "국경절 기간에 이뤄진 중국 해양감시선과 어정선의 다오위다오 순찰에 대해 일본이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었고 위축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고 분위기를 전하고 "일본이 그와 관련해 익숙해지도록 해야 한다"고 적음. 인민일보는 또 "국제법에도 들어맞는 중국 선박의 다오위다오 순찰을 일본이 이른 시일 내에 받아들인다면 다오위다오 분쟁에 대한 외교적 해결과 중일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함.



● "中-日, 미얀마 시장 쟁탈전"(10/13, 연합뉴스)

- 2007년 미얀마 양곤에서 일본인 사진기자 나가이 겐지(長井健司)는 반정부 시위 현장을 취재하다 군인이 발사한 총알을 가슴에 맞고도 끝까지 카메라를 놓지 않음. 나가이 기사는 현장에서 사망했고 그의 마지막 순간에 담긴 사진은 풀리처상을 받음. 이 사건 직후 일본과 미얀마의 관계는 사상 최악의 수준으로 악화됨. 하지만 현재 양곤 시내에서 나타나는 모습은 5년 전과는 완전히 다름. 나가이 기사가 사망했던 현장에서 불과 1블록 떨어진 양곤 시청에서는 수십 명의 일본인 엔지니어들이 도로와 전화, 인터넷망, 상하수도 등 사회기반시설을 재건하는 데 필요한 기획안을 짜느라 머리를 맞대고 있음.
- 뉴욕타임스(NYT)는 미얀마가 군사독재의 이미지를 청산하고 국가재건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일본이 대규모 정부 원조와 기업 투자 등으로 미얀마 시장 진출을 확대하면서 그동안 현지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리던 중국을 위협하고 있다고 12일(현지시간) 보도함. 한국과 싱가포르 등 여러 국가가 경쟁적으로 미얀마와의 협력관계 확대에 나서고 있지만 일본만큼 광범위하게 접근하는 나라는 없다고 타임스가 전함.
- 양곤 주재 일본대사관의 마루야마 이치로 공사는 "도외달라는 미얀마 당국의 손짓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함. 양국 간의 협력확대는 테인 세인 미얀마 대통령이 올해 일본을 방문해 대대적 지원을 호소할 것을 계기로 급물살을 타고 있음. 현재 일본 기업들은 양곤의 재개발 사업은 물론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 및 위성도시 건설까지 맡는 등 세인 대통령이 추진하는 국가재건 사업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미얀마 경제 전문가인 호주 시드니 매쿼이어대학의 신 터널 교수는 "일본이 미얀마 재건사업에 이처럼 발 빠르고 광범위하게 개입하게 된 데 대해 놀랐다"고 말함. 미얀마는 이들 핵심 사업의 파트너로 일본을 선택함으로써 중국 의존도를 상당 부분 해소하는 것은 물론 아시아의 양대 경제국인 중국과 일본이 자국 시장을 놓고 각축을 벌이는 효과도 거두게 되었음. 최근 수년간 미얀마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한 나라는 중국이었음. 터널 교수는 미얀마를 놓고 벌이는 중국과 일본의 경쟁에 대해 "아시아에서의 영향력을 놓고 벌이는 승부"라고 말함.
- 타임스는 현재로서는 미얀마 시장에서 중국과 일본의 이해관계가 겹치지 않는다고 밝힘. 일본은 현지의 값싼 노동력을 활용해 태국과 인도네시아에 집중된 제조업 기반을 미얀마로 확대하겠다는 전략을 갖고 있음. 반면 중국의 관심은 천연가스 및 귀금속, 목재, 고무 등 자원 개발과 미얀마의 수력발전소를 이용한 전력 생산에 집중됨.
- 그러나 미얀마 국민 사이에 중국 반대 정서가 강하다는 점에서 일본이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고 있다는 분석임. 최근 모니와 지역에서 구리광산 개발에 반대하는 시위가 열리고 중국이 주도하는 밋손 댐 건설 공사가 중단됐던 것도 중국이 자원을 약탈하고 있다는 반발심리가 폭발한 데 따른 것임.
- 미얀마 소재 연구기관인 CARI의 존 팡 대표는 "미얀마가 일본으로 기운



것은 일본에 대한 호감 때문이라기보다는 중국에 대한 반감의 성격이 크다"며 "일본은 위협적이지 않고 신뢰가 형성돼 있다"고 말함.

- **외교부, 日 겐바 외무상 발언에 "강도 논리다"(10/12, 인민일보)**
 - 홍레이(洪磊) 외교부 대변인은 11일 연례브리핑 자리에서 일본의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郎) 외상이 다오위다오(釣魚島)에 관한 중국 측 주장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힌 것에 반박하며 단장취의(斷章取義)한 자료를 가지고 일본의 주장을 뒷받침하려는 것은 '완전한 강도 논리'라고 밝힘.
 - 홍 대변인은 겐바 외상이 단장 취의한 자료를 가지고 일본의 입장을 고수하려는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며, 국가 영유권과 같은 중요하고 엄숙한 문제를 놓고, 지리멸렬한 자료로 일본의 입장을 내세우는 것은 오히려 다오위다오에 대한 합법적 주권을 한번도 가진 적 없다는 것을 증명할 뿐이라고 말함.
 - 또한, 일본이 갑오전쟁을 통해 다오위다오를 강탈한 역사적 경위에 대해 중일 양국학자들 모두 진중하게 구체적으로 논의를 전개한 적이 있고, 일본의 공식적 역사자료에서도 이를 명백하게 방증한다며, "일본은 이를 보고도 못 본 척 회피하고 오히려 전쟁을 통한 침략역사를 두둔하는 것은 완전한 강도 논리다"라고 밝힘.
 - 홍 대변인은 중국은 일본 측이 하루빨리 사태가 진정되고 양국관계의 안정적 발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를 바라는 태도에 주목한다며, "만약 일본이 언행일치된 태도를 보이다고 한다면 스스로의 도발적 언행을 깨닫고 실질적 행동으로 중일관계의 큰 방향을 지켜야 한다"라고 전함.
- **일본, 중국 영토분쟁으로 손상된 관계회복을 위해 고위급회담추진(10/13, 워싱턴포스트)**
 - 일본이 중국과 섬을 두고 벌어진 양국 간의 영토분쟁으로 얼룩진 관계회복을 위해 고위급 회담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짐.
 - 일본 외무성 장관인 고이치고 겐바는 금요일 "중국 외무성 담당자가 도쿄를 방문했으며 두 국가간의 긴장완화를 위한 조치를 함께 찾아보려하고 있다"고 언급함. 중국 동중국해에 있는 섬 (일본명센카쿠, 중국명 다이오유)에 대한 일본의 국유화 조치가 처해진 이래로 중국의 고위급 외교관이 일본을 방문한 것은 처음으로 알려짐. 이 사건으로 인해 중국 내에서는 반일 시위가 시작되었음.
 - 양측은 차관급 회담을 가지기로 했으며 정확한 일자는 밝히지 않은 채 겐바가 언급함. 일본 정부 대변인 오사무 후지무라는 향후 열릴 회담을 기점으로 양국이 다양한 통로를 통한 소통의 노력을 기울여 양국 간의 관계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함.